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박찬식*

<차례>

- I. 머리말
- II. 4·3 증언자료의 유형과 성격
- III. 4·3 증언에 나타난 자치의식
- IV. 맺음말

I. 머리말

1945년 해방 직후 제주지역 사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권력을 대체할 신진 세력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이들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중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새로운 정치사회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민위원회 중심의 자치운동 움직임은 미군정의 통치와 맞물려 친미형치인의 등장과 친일 행정관료·경찰간부의 재등장을 불러왔다. 1947년 3·1사건은 '민족 내 반민족'의 구도 속에서 민족·민중적인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이 공권력에 의해 일선에서 후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탄압과 저항을 거치면서 제주의 민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청년 급진세력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지만, 되려 강력한 진압에 부딪혀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되는 참화를 겪었다. 4·3 이후 극우반공체제의 권력 구조가 급속히 자리잡으면서 제주도민들은 군·경 중심의 극우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제주 4·3연구소 연구실장

4·3 당시 제주민들은 “낮에는 군·경 세상, 밤에는 폭도 세상”, “신 세느나 아래가 세나”를 저울질하며 살았다. “센 곳에 붙어야 살” 것이 는 생존 의식 앞에 어떤 이념이나 지향점도 가려져 버렸다. 그러나 죽어 가는 학살의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기 전에 그들은 “진정 잘 사는 상”을 추구하며 생활하였다. 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이념을 지향하는 체제가 아닌 자율과 자치를 토대로 한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였다.

3·1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고창무는 아래 글에서 이러한 제주도민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민은 이조시대에는 先罰後啓의 특권을 장악한 목사의 전횡에, 19세기 시대에는 郡守와 警察署長과 檢事의 직권을 한 손에 잡고 갖은 횡포를 당하던 島司의 억압에 시달려 판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체제생사의 판가름을 하여야 할 궁지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猛進하는 이와 같은 도민의 이율배반의 심성은 方哥난, 이재수란, 일제시대의 해녀 등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고 이발전적 해소되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한국민주당이 조직되고 임시정환국과 같이 한국독립당이 활동을 개시하고 이승만 박사의 환국과 독립축의 결성, 이외에도 우후죽순격의 대소정당의 난립과 좌우익의 분열, 그 결항쟁은 우리 민족의 쓰디쓴 과정이었다. 제주도에는 건준을 거쳐 인민위간판과 민주청년동맹의 간판이 나붙고 후에 한독당, 독축의 간판은 붙었지만 한민당 간판은 없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당시의 미군정이나 권력층에서 처에서는 못 보는 좌익계열의 간판이 버젓이 붙어있으니 눈에 가시였고 층에 아부하여 출세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小吏輩에게 針小棒大의 조작가 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선전하는 바와 같이 제주이 빨갱이는 아니었다. 분별 있는 분은 생각하여 보시라. 土豪도 없고 3이상 농토를 가진 지주도 없는 이 고장에 당시 각 정당이 서로 떠들어대고 토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유상몰수 무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 등에 무해관계가 있어 현신적 투쟁을 하였겠는가. 자고로 夜不閉門 道不遺捨의 이 있다는 도민에게는 日出而作하고 日入而息 할 수 있는 자유만 보장

그만인 것이다.¹⁾

또한 4·3봉기 발발 당시 제주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이던 김익도 그의 유고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성격을 밝혔다.

제주도민 중에 중년 이상의 지식인들이나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역사의 부정확과 허위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선조의 땅 제주도가 사상 최초로 공산반란을 일으켰다는 불명예로 더럽혀지고, 미군정의 경찰의 압정에 못 이겨 살기 위해 일어났던 폭동이 공산폭동으로 낙인 찍히고, 또 그 당시 살해된 사람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공비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불운에 있다. …… 4·3사건 발생원인과 발생 시기에는 순수한 민중폭동이었다. …… 나는 제주도 4·3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최후에 들고일어난 민중폭동이라고 본다.²⁾

이들의 글은 모두 4·3을 제주민 공동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현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인민위원회의 활동, 항쟁 시기의 공기 계양·인공가 제창, 5·10 선거 거부 등의 사례를 단순히 남한 정권의 거부나 북조선 정권의 지지로 파악하는 태도로서는 4·3의 진실을 보기 어렵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4·3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주로 항쟁과 학살의 진상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³⁾ 이념대립 구도에 파묻혀 있던 민간인학살

1) 『조선일보』, 1960년 7월 16일, 한라산은 고발한다.

2) 『재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박명립,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김창후, 『1948년 4·3항쟁-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20, 1993; 김종민, 『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 1998;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

의 실상을 드러내는 진상규명운동에 치중한 때문이다. 그리고 항쟁의 격을 둘러싼 논쟁만이 무성한 실정이었다.⁴⁾

다른 한편 당시 제주민들의 삶과 의식세계를 정면으로 파고 들 분석의 글은 별로 찾을 수 없다. 인류학 방면에서 무속을 통해 4·3을 다룬 김성례의 글과 사회학 방법론과 제주민의 증언을 통해 4·3 사회적 기억과 사회심리를 분석한 권귀숙의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종민과 황상익의 글도 제주공동체의 의식 변화를 다룬 것으로서 숙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⁶⁾ 그러나 위 글들은 증언을 통해 지역민들이 추구했던 미래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관념을 추적하지는 않는다. 주로 피해의식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억압에 가려진 적극 체제 건설에 대한 관념을 끄집어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4·3 체험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제주민의 경험과 역사적 의 속에 들어있는 자치의식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시도이다.⁷⁾ 제

원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4)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남로당의 무모한 투쟁노선에 따른 무장폭동과 미군정의 저항한 민중항쟁 등으로 상반된 성격 규정이 이루어져 왔다(양정심, 『제주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27, 1998;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연구』, 역사비평사, 1999; 박찬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 학사, 1999). 4·3사건이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한국현대사의 민감한 주제가기는 만, 남로당의 무장봉기, 도민들의 항쟁, 민간인 대학살이 종합된 총체적 사건은 데에는 이른 여지가 없어 보인다(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제주연구』, 역사비평사, 1999).
- 5)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권 5호, 2001; 권귀숙, 『살의 사회심리: 제주 4·3사건의 학살 과정』, 『한국사회학』 36권 5호, 2002.
- 6)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황상익, 『의 측면에서 본 '4·3'』, 같은 책.
- 7) 지역자치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본 글로는 고창훈의 글이 유일하다(위의 『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또한 박명림의 글에서 4·3을 지역자치·자율을 지향 제주공동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파괴와 억압에 저항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내 있다(『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연구 : 제주 4·3과 한국현대사』, 『제주4·3

이 중앙·내륙지방과 떨어진 섬에서 해방 직후 새로운 체제 수립과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가졌던 자치·자율의 경험이 탄압과 저항·봉기, 학살로 이어지는 4·3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굴절되어 있는지 역사적 기억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4·3 증언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구술사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다행이겠다.

1. 4·3 증언자료의 유형과 성격

4·3 증언은 1960년 4·19 직후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 만에 5·16으로 말문은 다시 막혀버렸다. 일본에서는 4·3 때 피신한 제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63년 김봉현·김민주가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출간했다.

제주 현지에서의 본격적인 증언 채록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진전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수행된 증언 채록은 주체별로 크게 4·3연구소와 제민일보 4·3취재반, 4·3진상명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3연구소는 읍·면별 포괄적 증언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제사 말함수다』에는 조천면과 애월면의 증언을 채록을 그대로 수록하였지만, 한림면과 대정면의 경우에는 증언 내용을 문헌자료와 교차 검토, 재정리하여 읍·면 단위의 4·3 역사로 서술하여 놓았다. 4·3취재반은 신문 연재를 위한 취재에 주력하였다. 시기별로 개괄적인 전개 상황을 서술하면서, 학살시기에는 마을별 학살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신문 연재 내용을 다

역사비평사, 1999). 그러나 이 글들은 4·3 증언과 역사적 기억을 토대로 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아니다.

시 「4·3은 말한다」 5권으로 재판집 출간하였다. 4·3위원회는 진상 보고서 작성을 위해 증언조사를 수행하였다. 학살의 진상 규명에 사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외 관련자의 증언을 채집하였다.

1. 4·3연구소

1980년대 이후 현기영·오성찬 등에 의해 개인적 작업으로 증언이 이루어져 오던 것이 1988년부터 소수인력의 공동작업으로 수렴되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구심체로 하여 1989년 5월 4·3이 문을 열었고, 개소 기념으로 「이제사 말합시다」 2권이 발간되었던 작업에 의한 본격적인 제주 현지 증언채록은 4·3연구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4·3에 대한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었으나, 이장의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당시 사회운동권 내에서 “4·3은 고순의 뿌리이자 현재 모순의 출발”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줄곧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사라져 가는 현장 경험자들의 증언이 시급하다는 절박감 때문에 부족한 인력으로나마 증언 채록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한 4·3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실증적인 작업이 선행되는데, 항쟁 주체들의 기록은 물론 경찰이나 미군정의 자료도 입수해 들고, 1차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증언 채록은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단 증언 채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두도도 상이하게 나오는 증언을 교차 확인하고, 신문이나 기타 자료를 때는 증언과 대조하면서 개연성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검증작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채록자(질문자)가 어떤 입장 내지 관건이고 어떤 방법으로 채록했는가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파악되므로, 사전 질문지 작성에도 토론을 거치는 등 신중을 기했

1·3연구소는 소수의 인력을 토대로 증언조사의 조직적인 틀을 갖추서 면 단위(4·3 당시 제주는 1읍 12면)로 채록하기로 계획하였다. 3년의 기간 동안(1988~1990) 4개 면을 채록하였다. 우선 4·3 당시 항쟁 비교적 치열하게 전개된 조천면·애월면·대정면·한림면을 조사 대으로 선정하였다.⁸⁾ 이들 지역은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4·3봉기를 전후한 시기 민중운동의 핵심지역이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청 소재지인 제주읍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고 증언조사가 중단되어 버림으로써 4·3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였다.

4·3연구소가 수행한 4개 면 증언 채록의 전체 표본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증언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원본 및 녹음 테이프는 4·3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제사 말씀다」 1, 2권에 증언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수록해 놓은 것은 조천면·애월면의 증언 내용이다. 한림면 증언은 「제주항쟁」 창간호에, 대정면 증언은 「4·3장정」 6호에 각각 인용되었다. 4·3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취록을 대상으로 4개 면 증언자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4·3연구소 증언자 분포

항목 면	증언자 수	연령별 분포					남녀별 분포		출신성향별 분포					
		50대	60대	70대	80대	기타	남	여	무장대	군·경	좌익단체	우익단체	일반주민	기타
조천면	20	5	6	3	4	2	16	4	1		9	2	8	
애월면	22	3	7	7	1	4	19	3						
한림면	27	1	10	11	4	1	25	2						
대정면	24		8	5	5	6	24	3	1	1	1	4	5	13

(연령은 증언 채록 당시 기준임. 조천·애월면 - 1988년, 한림면 - 1990년, 대정면 - 1992년)

3) 대정면의 경우 1992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4·3장정」 6호에 그 결과를 정리 서술하였다.

조천·애월면의 증언 내용은 「이제사 말함수다」에 수록되었는데 언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려는 뜻에서 4·3 체험세대들이 사는 제주말을 그대로 옮겼다. 4·3 당시 생동하는 제주민중의 정서를 상시키지 않고 당시 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 한편으로는 4·3에 대한 이해를 보편화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신빙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자칫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식인 원한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자는 의도였으며, ‘모두는 피해자’라는 화해와 상생을 바라는 배려였음을 밝히고 있

또한 증언 채록 주체들은 구술사·생애사적 접근 방식에 충실한 채록 방법의 미숙함을 고백하고 있다. 한 증언자를 택했을 때 람의 살아온 배경, 현재 위치, 가족들의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알맞은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였으나 준비가 미흡하였다이다. 증언자들은 40여 년 동안 강요된 반공이데올로기의 횡포를 본능처럼 움크리고 있었으며, 이야기하고 나서 본인보다는 가족을 미칠지도 모르는 피해를 두려워하였다. 1980년대 후반 증언 채록에서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닫힌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과제였다

증언 대상의 한계점도 지적된다. 당시 경찰·군인, 미군정에 사람, 서청 등 우익단체원 등의 증언 채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대로서 입산 후 최후까지 항쟁한 일부 경험자의 경우에는 소재지 했으나, 끝내 증언 자체를 거부하거나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움도 있었다.

한림면 증언 채록은 199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 증언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과정(보충 취재)에서 1개월 이상이 다다. 1991년 한림면 채록을 담당했던 주체들의 작업 후기를 보면, 역의 보수성 또는 3당 합당 이후 공안정국의 조성으로 인한 정치

때문에 조천·애월면보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증언 채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전 채록이 마을 단위로 준비 없이 증언을 담아내는 데 급급하였던 데 반해 한림면의 경우 증언자에 대해 미리 분석을 하고 들어갈 뿐 아니라, 내용 분석의 틀을 만들고 사안별·시기별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증언자의 가계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당시 발굴된 『제주신보』는 사전 작업에 커다란 지침 역할을 하였다.⁹⁾

1992년에는 대정면 증언 채록에 나섰다. 대정면 채록은 이미 1988년에 1차 이루어졌으나, 당시 작업 결과는 연구소의 사정 때문에 활자화되지 못했다. 이후 「4·3장정」 2호와 3호를 통해 구역리와 가파리 상황을 소개했지만, 대정면 전체의 개괄적인 상황을 다루지는 못했다. 결국 1992년에 이루어진 증언 채록 결과와 1차 결과물을 재정리하여 1993년 「4·3장정」 6호에 대정면의 상황을 시기순으로 서술하게 되었다. 대정면 조사 서술에서는 증언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조천·애월면), 증언 내용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방식(한림면) 등의 일률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위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며 증언의 내용을 타 자료와 대조하면서 각주를 달고 고증하기도 하여 증언에 과학적 객관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정면의 경우 항일운동과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활동이 강력했던 지역적 특징과 더불어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증언 채록에 활기를 띠었다. 특히 대정면당 무장대원 김봉길의 증언을 발굴해낸 것은 큰 수확이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수행된 4·3연구소의 증언 채록은 인력·재정의 부족 때문에 증언채록팀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현장에

9) 양성자, 「한림지역 현장조사 사례」, 「4·3 43주기 '사월제'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제주4·3연구소, 1991.

들어가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열악한 작업 조건 때문에 작업 주체가 자주 교체되었고,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처음에 참가한 인력이 작업 결과물의 정리를 잘 해놓지 않음으로써 후속 작업자가 원점에서 시작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또한 '4·3연구소'라는 이름 때문에 군·경 및 우익단체 출신자들에 대한 접근이 힘들었고, 항상 공안기관의 감시로 인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4·3연구소의 증언 채록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열기와 함께 이루어진 정치사회적 지형에 따라 민중항쟁적 성격을 확인해 보려는 연구소 주체들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에 다가간 조사자들은 아직도 굳게 닫힌 채험자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살의 진상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고발하는 증언자들의 분위기에서 4·3의 학살사태로서 성격을 강하게 인식하였다는 성과 또한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때의 증언 채록을 항쟁의 입장으로 다룰 것인지, 학살의 입장에서 다룰 것인지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¹⁾

2. 4·3취재반

4·3연구소의 증언 채록과 비슷한 시기인 1988년 구성된 제주신문·3특별취재반'은 대하기획물을 연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증언 채록 착수하였다. 「4·3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1989년부터 연재되기 시작하여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지며 장기간에 걸친 취재가 이루어졌다. 단행본 「4·3은 말한다」 1, 2권이 출간된 1994년까지 제주 내외에서 채록한 증언자는 3,000여 명이라고 취재반은 밝히고 있다. 숫자는 4권이 간행된 1997년에 5,000명으로, 취재 10주년이면서 5권

10) 정근식, 「집단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 『제주4·3 제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요지문-학살·기억·평화 : 4·3의 기억을 넘어, 2003, 74쪽.

은 1998년에는 6,000명으로 늘어났다. 일본어판으로만 출간된 6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려 잡아야 할 것이다.

취재반원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언론사상 한 사건의 심층보도를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취재반을 가동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자평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와 서술을 하였다. 취재반은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속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반복되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 실증적인 내용들에 한해서 기획물로 다뤘다. 책으로 엮어내면서 신문 연재 때 생략했던 증언자와 인용 자료를 일일이 각주로 밝혀놓았다.

공개된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4·3취재반의 6,000명에 달하는 증언을 일일이 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4·3은 말한다」에 인용된 증언 내용을 통해서 그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각 권의 각주를 통해 밝혀놓은 증언자 수는 1권 92명, 2권 75명, 3권 151명, 4권 159명, 5권 366명, 6권 172명 등이다.

일단 책을 통해 공개된 증언자의 숫자만 해도 1,105명에 달한다. 정기(매주1~2회) 연재의 특성상 개개 사실의 확인을 위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증언 채록이 이루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다. 향후 증언 채록 방식에 대한 인터뷰, 증언자의 녹취록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증언자료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행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4·3취재반 증언 채록의 성격은 대체로 각 마을 단위에서의 4·3 전개과정과 피해사태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확인하기 위해 무장대나 토벌대 활동을 했던 사람, 조사 마을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말해 줄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질문만을 하였다는 것이다.¹¹⁾

3. 4·3위원회

4·3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위해 중·소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증언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정하되 균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도의회 피해 신고자료와 신문, 방송의 자료, 증언집 등 기 자료에 언급된 증언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어 증언대상자에 대해 기관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진압작전 지휘관과 무장대 출신자 등에 한 자체 발굴작업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증언채록 대상자 모단으로 2,87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명단을 중심으로 다시 500여 명 추려내는 작업을 했다. 기준은 첫째, 평범한 사람보다는 특이한 출신향의 경험자, 둘째 특정사건이 일어났거나, 피해가 심한 마을 출신자, 셋째 기관 추천 및 자체발굴 대상자들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증언대상자의 나이 등 증언의 신뢰성과 능력을 고려했다. 증언대상자들 가운데 조사기간 중 사망했거나 본인의 고사로, 또 새로운 증언대상자의 발굴 등의 이유로 일부 교체 보완됐다.

증언채록 조사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제주 현지에 조사요원 3명을 증언 채록 전담력으로 활용하여, “2인 1조 현장 채록, 1인 사무실 자료 준비 및 채록자료 정리”의 원칙을 세워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요 증언자의 채록에는 상조사 전문위원이 현지 출장 채록을 직접 수행하였다. 채록 결과는 절대 1주일을 넘기지 말 것이며, 증언채록자 본인이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증언은 녹음기로 녹취하고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1) 정근식, 위와 같음.

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관되게 기재하였다(별첨 자료 참조).

번호 / 성명 / 성명(한자) / 생년월일 / 나이(○○년) / 성별 / 당시 직업 / 출신성향 / 당시 거주지 / 현 주소 / 출처 / 주요 내용(제목) / 시기 구분 / 인명 / 단체명 / 주제어 / 성격 평가 / 관련 파일 / 증언 일자 / 녹음, 사진·비디오 촬영 여부 / 내용 요약

4·3위원회에서 채록·정리한 증언자의 출신성향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4·3위원회 증언자 출신성향별 분포

계	농어업	군인	경찰	학생	주부	피난입산	우익단체
503	90	45	48	55	39	52	66
	좌익단체	공무원	회사원	교원	미국인	재일동포	기타
	20	9	10	13	3	35	18

조사는 제주, 서울,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도 진행됐다. 일본 증언조사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 재일동포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4·3'무장투쟁을 결정한 1948년 2월 '신촌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는 한 재일동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소득이었다. 또한 미국 조사에서 4·3사건 기간에 제주에 근무했던 피쉬그룬드(Harold Fischgrund·9연대 고문관)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11연대 고문관), 에드워드(Joseph Edward·9연대 대대 고문관) 등 미군 장교 출신 3명을 만나 미군의 입장을 청취한 것도 의미있는 조사였다.

제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 장교 출신자 가운데는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 차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12명에게 위원회 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명이 나중에 증언채록 조사에 응했다.

조사팀은 사전에 증언대상자들의 기존 증언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편, 그 해당 증언자의 주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 기초적 설문을 마련했다. 증언조사는 개인적인 체험담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 뒤, 준비된 설문에 따라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증조사 결과는 모두 7권의 증언자료집(총 2,958쪽)으로 정리되었다.

이 증언조사는 50년 전의 사건을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히 드러냈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기억의 한계성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기인 선택성으로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었다. 특히 증언내용 가운데는 사 발생 시점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어떠한 증언이든 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했다.

증언자료를 진상조사보고서에 인용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했다. 그 중요한 기준은 그 증언이 사실(facts)에 부합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였. 이것은 단순히 한 증언자의 이야기로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증언자의 증언내용과 각종 문헌자료의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 시 시대상황에 대한 해석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즉 교차(Cross Check) 검증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증언자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도 함께 실시했다.¹²⁾

4·3위원회의 증언 채록은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며, 4·3연구소, 도의회 4·3피해신고실, 4·3취재반, 국방부 군사편찬연 등이 과거 채록한 결과물을 재확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기존 증언자일지라도 주요 증언 내용이면 다시 해서라도 공식자료로 다는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조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 기초적인 사항부터 다시 확인하여 기록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때때로 증언의 경우, 재조사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제외시켰다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43-55쪽.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무력충돌과 희생'의 실태, 특히 학살의 전모를 사실하게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사료 가치를 높이기 위해 증언자의 기억을 그대로 채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질문 내용에 주관적인 견해가 이입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타 기관에서 행한 작업에 비해서 4·3경 출신자의 증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핵심 관련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여전하였다. 또한 학살의 실태를 확인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4·3의 항쟁적 성격을 드러내는 무장대 출신자의 증언 채록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매달 30명씩(매주 7~8명) 채록하고 1주일 내 기록 결과 정리 완료"한다는 강행군 원칙 때문에 당시 체험자들의 생활상의 의식세계를 구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술사 자료가 아닌 사실 확인 근거 자료로서 증언 채록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 증언채록의 주체, 정리·샘플추출 방식 >

① 채록 주체(조사원)

- 4·3연구소 : 연구소 연구원(주로 문학도, 교사, 대학졸업자로 구성)
- 4·3취재반 : 처음 6명의 기자로 출발, 1990년대 중반 이후 2명으로 축소 운영
- 4·3위원회 : 서울 주재 진상조사 전문위원 2명과 제주 주재 조사요원 3명
 - 대부분의 조사는 제주 조사요원이 전담
 - 조사요원은 4·3연구소 연구원 경력자 2명과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재학생 경력자 1명으로 구성

② 정리·문자화 방식

- 4·3연구소 : 심층면접 방식, 「이제사 말함수다」(제주도 방언 그대로 수록)

○ 4·3취재반 : 심층면접 방식(개별적 사실에 대한 확인), 표 정리

○ 4·3위원회 : 심층면접 방식, 표준어로 정리

③ 샘플 추출 방식

세 사업 주체 모두 제주도의회 발간 「4·3피해신고서」(1만4천명)를 기본자료로 삼았음. 4·3위원회의 경우, 4·3연구소, 도의회 4·3신고실, 4·3취재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이 과거 채록한 결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Ⅲ. 4·3 증언에 나타난 자치의식

1. 해방과 자치

8·15 해방으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난 제주도민들은 일터 독립을 맞는 느낌이 남달랐다. 제주농업학교생 8백여 명은 곧 9월 16일 청년학도단을 결성하여 일본군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학교에 있는 일본군사령부의 무기고를 점령하려고 대치하기도 하였다. 각 지역별로 보안대·치안대·자위대 등을 결성하고 각 기관별 위원회·관리위원회를 자주적으로 조직하였다.

자주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전로 조직되자, 제주에서도 대정면 건준을 시작으로 9월 10일에는 건준이 결성되었다. 이어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제주위원회는 9월 22일 제주농업학교에서 각 읍·면 대표들이 참석하여 결성되었다. 인민위원회 조직을 계기로 1945년 말에 이르기까지 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대중단체가 속

되었다.

건준과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많았다. 제주도 항일운동이 사회주의 성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인민위원회는 자연 좌익 성향 인물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일제 때 현장을 지냈던 사람들도 간부로 포용하는 등 대체로 좌우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치안활동에 가장 주력하였다. 치안 업무는 주로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것과 토지·산업체 등 敵産이나 군수물자를 멋대로 처리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는 각 면별로 국민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각 면과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다.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어김없이 마을 향사를 사용하였다.

미군정 당국에서도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도내의 유일한 정당으로서, 모든 면에서 정부나 다를 바 없는 유일한 조직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1946년 12월 동아일보는 “세간에서 제주는 좌익 일색이며 人委의 천하는 말이 있으나, 제주의 인위는 건준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韓獨, 獨促國, 韓僑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움직임과 함께 제주도에도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이며,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10일이었다. 50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

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구대항할 세력을 키워갔다. 1946년 8월 1일 濟州島의 道 승격은 우지를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도 승격을 줄곧 주장하우익세력의 손을 미군정이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도수계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조선경비대 9연대가 창설되는 등 물리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1946년 말부터 인민위원회에 대한 미군정 탄압이 가해졌다.

1946년 12월 자유신문은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는 것에 관해영에서는 당국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도민의 태반을 위시하여 도로 승격한 것을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반대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본토와 고립됨으로 등 물자교류가 힘들 것, 둘째 모든 행정구역의 개편은 미군정족의 뜻에 의해 수립될 우리 정부에 맡기고 싶어하는 것, 셋째 이후 기구가 확대되어 세금이 늘고 2백명이던 경관이 곱으로 1넷째 제주도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 등이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 강행은 도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경제적움이 중첩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미군정은 경제서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생필품 수급의 원활화와 물가 안정에 두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양곡 부족 사태하고 양곡 가격이 폭등하였다. 식량난은 해방 직후 6만 명에 이환인구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는데, 해결책으로 제시된 미곡수조 실패로 도민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제주도의 공업은 가내공업·수공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그 원료로 하는 주정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식료품 제조공장 등이 나, 이나마도 해방 직후 원료 공급이 끊어져 가동이 중단되었다.

거의 없어 생필품이 귀해지자 도민들은 일본으로부터 물자 도입에 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본에서 돌아오는 도민들 가운데는 고향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무허가 밀무역'으로 규정하여 금지하여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 밀무역 상인들이 늘어났고, 밀무역 단속기관과 모리배의 결탁에 따라 품이 빼들려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7년 1월 市丸 사건'으로서, 도민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미군정 당국과 경찰을 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군정의 실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 인민위원회는 설불리 미군정을 공격하지 않았다. 1946년 말 전국 강타한 '10월 항쟁'에도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당시 제주도 인위원회 세력 지도부는 온건노선을 걷고 있었다. 앞의 1946년 12월 가일보는 "세간이나 군정이나 관청이 이구동성으로 제주의 정치계는 간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듬해 발생한 3·1사건은 이러한 구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과를 가져왔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 실시에 반발하여 '남로 濟州島黨'이라 자칭하였다. 미군정 당국에서 도제 실시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인민위원회에서는 평소 전남과 분리된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 전서도 제주도 승격 문제는 미군정하에서가 아닌 정부 수립 이후에 진할 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의 자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정부의 손으로 해야지, 어제 미국인의 손으로 결정하느냐는 게 거부감의 이유였지. 그래서 '당에서나 우리들의 활동 과정에서는 도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道'보다는 '島'를 그대로 사용했지."¹³⁾

인민위원회 측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전자의 자존 문제에 더 중을 둔 듯하다. 또한 당시 도제 실시 문제가 미군정과 우파진영 인의 주도 아래 추진된 점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긴 이유의 하나 혹은 두는 “미 제국주의가 제주도를 반공보투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제주를 전라남도에서 행정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도 했다.¹⁴⁾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중앙의 방침과 다른 독자적인 판단을 했던 사례로서 반탁운동 참여와 과도입법의원 선거 참여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6년 중반까지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하였다. 제주읍에서는 2만이라는 인파가 모여 ‘신탁통치 절대반대’ 슬로건으로 시위하였다. 대정면 대정국민학교 집회에서는 미군이 출동하여 대정면 인민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신착 가르착’이란 유행어를 기억한다. 중들이 문제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었는지 모르나 정치권이 주 없게 시류에 편성, ‘이래착 저래착’하여 자기들과 유리되는 측면을 의 갈창에 빚대어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체적이지 못하였다. 세력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대중들의 열망을 제때 하지 못해 혼란이 오자 그때까지 기를 못 펴던 극우세력들이 이런 십분 활용 신탁내용의 본질을 왜곡하여 선전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당시 친 반탁에 대한 정보가 어두웠기 때문에 민중들은 자기들과 인간적으로 호감 있게 생각되는 사람들의 흐름에 동참하였다.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던 또 하나의 사례는 1946년 10월 29일 남

13) 이운방의 증언 : 『4·3은 말한다』 1, 167쪽 재인용.

14) 『이제사 말합시다』 2, 31쪽.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이었다. 제주도당은 중앙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순수한 동기로 '선거 투쟁'에 돌입하였다. 투쟁 과정에서 도당의 지도력이 미약했음이 폭로되고 선거 전략의 치졸함과 그의 반동성으로 말미암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간신히 기적적으로 넘겼다. 이 사례는 중앙당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과도입법의원 선거 투쟁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조선공산당 제주읍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당에서 추진하였다.

2. 탄압과 저항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제주도 좌익 진영은 이날 기념식을 전도민적인 행사로 치르기로 준비하였다. 2월 17일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2월 23일 제주도 민전이 결성되자 3·1기념행사 준비는 민전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미군정 당국은 2월 23일 충남·북 용원경찰 100명을 제주에 급히 파견하여 비상경계에 돌입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 원칙을 정하였다. 민전 의장단과 미군정 당국은 몇 차례 만나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되었다.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별로 치러졌고, 제주 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명이 모였다.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곧바로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관덕정을 거쳐서 서문통으로 시위대가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굽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흥분한 관람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하자 곧바로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던 무장경찰이 총격을 가했다.

는 감착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는 15세 국민학(교)생과 젓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다

이 발포사건으로 제주도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1월 준비위원회 간부들을 검속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마구 잡아들였기에 좌익진영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군정과 경찰의 만행을 폭파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집에 돌입했다. 그리고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로 총파업이 이어졌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단체 직원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중앙 미군정청은 3월 8일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했으나, 공식적인 진상 발표는 전혀 없이 13일 돌아갔다. 이어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욱이 내도하여 총파업을 분쇄하여갔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용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용원경찰 99명을 파해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다. 또한 3월 15일부터 파업 주도 혐의민전 간부들의 연행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500명을 검속했다. 검속자들은 5월말까지 328명이 재판에 회부, 52명이 실형을 언도받아 목포수소에서 복역하였다.

조병욱은 총파업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항변하고, 북조선과의 통모로 사건 발생했다고 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장하였다. 이 사건 직후 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좌익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하여 미군정의 일제 제주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미군정은 3·1사건이 마무리되어가자 제주도 군정장관 등 고위관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였다.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배를 임명하고, 4월 2일에 도 군정장관을 강성으로 알려진 베로스 중위로 교체했으며, 또한 4월 10일 자로 박경훈 도지사의 후임에 극우인 유해진을 임명하였다. 미군정은 관공리와 교육계에 대한 숙청 작업에 나서하여 총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을 파직시켰다. 파업에 동참한 경찰관 3명도 파면되었다. 또한 철도경찰 245명을 모집하여 제주도에 배치시켰다. 4월말 제주도의 경찰 병력은 5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서북청년회원이 10여 명이 제주도에 들어와 만행을 저지른 것도 이때 이후의 일이었다.

한편 미군정은 47년 5월 16일 행정명령 제2호로 조선민주청년동맹을 불법단체로 지목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구좌면 종달리에서는 6월 6일 마을 민청대회가 열렸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참가자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청원들과 경찰간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은 이를 빌미로 43명을 검거하였다.

8월에 접어들자 미군정은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도지사 사임 후 제주도 민전 의장으로 추대된 박경훈씨를 비롯한 민전 간부 30여명을 구속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검거를 피해 도외로 혹은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한라산의 동굴 등에 은신처를 마련해야 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그 과정에서 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곡수집 담당 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47년 3·1사건으로 제주도민은 원하지 않던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다. 전 도민의 공동체적인 3·1집회 참여와 3·10총파업 동참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후 제주는 일방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4·3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주사람들은 고립된 작은 섬에서 세계냉전구도가 빚어낸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47년 3·1사건과 총파업을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3·1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3·1운동에 가서 만세 불렀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는 "실

질적으로 아직 해방되지 않은 민족이 해방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당시 제주도 민중의 정서가 담긴 역사적 기억이라 할 수 있다.

1947년 3·1시위를 계기로 제주도 민중과 좌익 민족운동세력은 제주도 자치정부를 탄압하는 미군정과 정민으로 내걸하였다. 자치투쟁과 생존권투쟁에서 반제자주화 평화항쟁으로 전환한 것이다.¹⁵⁾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조천면·애월면 공동으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는데, 3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대정국민학교 6천 명 등 전도적으로 4만여 명이 참석한 유례없는 행사였다. 한 행사에 이렇게 엄청난 대중동원력을 보인 것은 아마 제주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조천·애월면 지역에서의 증인에 의하면, 이 기념식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마을별로 모여서 15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참가하였다고 한다. 8·15 이후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열기가 느껴진다.

3·1집회는 제주도에 8·15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가 행정권을 접수하지 못한 채, 미군이 와서 이를 접수하고 군정이 실시되면서 서로 대립하는 모순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대회였다. 4·3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3·1사건은 해방이 되었는데도 자주독립국가 건설되지 못하고 미군정이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억압통치를 한 것이 배경을 이루었다. 제주도에서는 일찍부터 조속한 민족국가의 수립을 열망하였고, 그것의 연장으로서 단선단정 반대가 도민들의 4·3 동조의 중요 요인을 이루었다. 제주읍에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1947년 3·1 기념식에서는 3·1정신을 계승하고 발양할 것을 다짐하며, 외군 철퇴, 외세의 간섭 배제, 미소공동위원회의 조속 개최, 조국의 신속한 통일독립의 전취 등을 외쳤다.

3·10관민총파업 때에도 “감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발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무장옹원대를 즉시 철수하라! 미군 책임자는 사죄하라!”

15)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260쪽.

구와 함께, “미소공위는 즉시 재개하라! 조국의 분단 음모를 분쇄라는 주장이 씌어있는 뼈라가 도처에 붙었다.

1사건은 제주역사 자체의 관점과 제주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조명·요가 있다. 첫째, 3·1사건은 전통시대 제주도 민란과 항일운동의 율이온 민중운동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적(지역)·거도(층)으로 참여했으며, 3·10총파업에서 그것은 최고조에 달했다. 들(주지역의 이념과 지배엘리트가 변화하는 계기점이 되었다. 일제시(부터 해방직후, 4·3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놓여있는 3·1사건을 정점으로 새로운 이념과 세력이 실현되었고, 그것은 4·3을(너 좌절되는 격변의 흐름을 거쳤기 때문이다. 셋째, 거시적으로 ‘중(지방)의 역학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꺾여버리는(를 가져오기도 했다. 3·1사건을 전후하여 지역 자치에 대한 열렬한(감이 표출되었는데, 이는 일제하 도의 유출에 따른 새로운 세계관의(에 따른 당연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1사건 이후 조(개 제주에 대한 중앙의 ‘변방관’이 부활하였고, 4·3을 거치며 중앙(방 제주에 대한 압살이 이루어졌다. 제주 민중의 자치와 자율을 철(짓눌러버린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 3·1사건은 있는 것이다.

1사건 이후 4·3 무장봉기 때까지 제주도민의 외부세력에 대한 반(커져갔다. ‘섬놈들’로 규정된 제주민들은 진압 경찰과 서북청년회를(것들로 경원시했다. 3·10총파업 때 중문지서 양경한 주임(제주출(반발하여 파업에 가담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이는 4·3 봉기 이후(형(미국)과 이승만의 지시를 받아 타도에서 들어온 서청·옹원경찰(·토벌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3봉기에 가담했던 중언자들은 봉기 이전 육지 경찰과 서청의 횡포(행, 관공리들의 부정 내용을 구술하고 있다. 남로당원들은 상당수가(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마음으로 난독선거를 반대했다고 말

한다. 이운방은 “주도지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렀지. 그러나 그들의 정신만큼은 비난할 수가 없어.”라고 항변하

“금반 사건의 직접 원인이 청년단체와 일부 악질 경찰관의 악행에 것이 분명한 이상, 도민의 거의 전부가 참가할 것은 과거의 전통으로 심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그 원인을 조성한 것이 외부(육지)에서 들어온 것에 의한 것이 분명하여진 이상 더 말할 것 없다.”¹⁶⁾

위 기사에서 보듯이, 제주도를 취재하러 온 기자 흥한표는 4·3의 원인으로 ① 경찰의 가혹한 행동 ② 사설청년단체원들의 경찰 경찰권 행사 ③ 관공리가 모리에만 열중하고 사무를 등한히 한 것 부세력의 침입에 대한 도민들의 감정 악화 등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말 20세기 초 제주민란, 특히 1901년 '이때 외세인 천주교와 결탁한 봉세관과 이재수로 대표되는 제주민란'과 결 국면과 비슷하다. 하효리 주민 오신락이 교당에 끌려가서 죽었다. 이 1901년 민란을 유발했던 것과 비슷하게 1948년 3월 세 건의 고사건이 터지면서 4·3봉기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도 가지 증언이 뒷받침된다.

4·3봉기 발발 당시 제9연대장 김익렬이 당시 남긴 참전기에 같이 봉기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소위 4·28파업사건과 3·1기념행사 관계로 제주도 약 2,500명의 청년이 경찰에 구금되었고, 이 구금으로 3명의 拷問致死 기고 3월 15일 치사자 李모라는 청년의 시체를 投江하려다가 그 기 발견된 것이 극도로 민심에 큰 충격을 준 것이라고 한다.”¹⁷⁾

16) 흥한표,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천지』 1948년 8월호, 60-61쪽.

· 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자격으로 1948년 2월 무장투쟁 결정한 신춘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이삼룡도 고문치사 사건이 봉기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초 악질경관과 서청을 공격대상을 삼았지 경비대는 아니었다. 미군에게도 맞대응할 생각이 없었다. 미군에 대해 다소 감정은 있었지만 그들은 신중 무기가 많은데…… 우리가 공격한 후 미군이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선 시위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장기전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익렬과도 회담을 한 것이다. 더 이상 끝낼 피해가 많겠다는 생각에서 회담한 것이다. 그런데 김달삼이 ‘5·10단선 거부, 통일정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김익렬은 ‘5·10선거는 내 선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무튼 우리의 지식과 수준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가 정세파악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이승진의 바람에 휩쓸린 것이다. 그러나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였다.”¹⁸⁾

또한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한 무장대 총사령관 김남의 연설 내용도 이러한 정황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인민은 놀리면 놀릴수록 더욱 단결하며 더욱 강한 힘으로써 반항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주도 인민들은 지난 2월 7일을 기하여 남조선 전지역에 걸쳐서 蘇美양군의 즉시 동시철폐, 유엔위원단의 퇴거, 단선반대 등의 표어를 내걸고 일어난 2·7총파업투쟁에 호응하여 용감히 일어섰으며 이 투쟁에서 제주도 4만 농민들은 시위로써 인민항쟁의 막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같은 제주도 인민의 정당하고도 평화적인 항거에 놀란 미제국주의의 그 주구 반동경찰은 그 탄압정책을 더욱 잔인한 학살정책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동족의 피로 물든 濟州參戰記, 전 재9인내장 金益烈 중령 記』, 『국제신문』 1948. 8. 6. ; 『동란의 이모저모』, 『신천지』 1948년 8월호에 재인용.

이삼룡의 증언(2002. 7. 11. 채록 ; 4·3위원회 증인집).

남로당을 비롯한 민전 산하의 민주주의적 애국단체에 대한 폭압은 더욱 악랄화해졌으며 민주주의 애국자와 일반 인민들에 대한 살인 방화 강도 파괴는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농들의 비인간적인 만행과 폭압이 얼마나 잔인무도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충분히 말하여 줍니다.

3월 4일 조천면에 사는 김용철이라는 22세밖에 안된 중학생을 잡아다가 반동살인 경찰은 빨갱이라고 서내에서 구타 고문한 후 화침질을 하며 공공연히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김용철 동무는 최후의 순간까지 '박헌영선생 절대 지지'와 '인민공화국 사수'를 외치면서 그놈들에게 항거하였던 것입니다. 사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달아 3월 14일 대정면에서 양은하라는 27세된 농민을 잡아다가 전신의 뼈를 하나 남김없이 산산히 부서어 죽여버렸으며 18일에는 제주읍 도두리에 사는 박모이라는 한 농민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빈사의 경에 이르러 한 후 죽을 직전에 가족을 불러다가 살아있는 때 석방했다는 증명을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 농민은 그 경찰서 문을 나와 5분 만에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20일에는 애월면에서 송○○라는 지서장놈이 애월리 거주 농촌 부인에게 폭행을 한 후 산에 데리고 가서 일본도로 난자하여 24개소의 상처를 입힌 일이 있고 조천면 선흘리에서는 빨갱이 근거지라는 구실로 가옥 5호에 방화하고 가축 20두 이상을 총살하였으며 심지어는 삼림에까지 방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의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당시의 제주도 정세는 '생지옥'이라는 한마디로써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¹⁹⁾

증언자들은 4·3봉기에 대한 평가를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무장대의 호칭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 및 정부문서와는 달리 부르고 있다. 증언자들은 이들을 산군, 산사람, 산활동가, 인민군, 해방군, 산군, 폭도, 빨갱이 등으로 부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사람'이라 부르고 있다. '산사람'에 대한 평은 좋았으며, "시대가 좋았으면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였다.

19)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 중요문헌집」; 제주4·3사건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2에서 재인용.

와홀리의 인민유격대 최후사령관 김의봉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거의 신화적 존재로 기억되었다. 당시 그가 그렇게 날쌌는지, 어릴 때 그는 학교 가다가 꿩이 나는 것을 보면, “날아가는 꿩을 꼭 잡고 학교에 갔다”고 하였다. 제2대 무장대 총사령관 이덕구는 유아 시절에 몇 달 안 되어 초가지붕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정도로 날랜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합덕리에서는 김양근이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되는데, “조봉구 꼬임에 빠져서 훌륭한 우리 합덕 김양근이 죽었다”고 하였다. 입산 항쟁자에 대해서 제주도 ‘장두정신’의 전통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산사람’도 일부 몇 사람이 조직 활동에 치중하거나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문제나 생존의 문제, 민족해방의 문제에 대한 고민하였다고 보고 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통해 선택한 것이 4·3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48년 5·10단선 거부투쟁은 3·1운동과 비교해 중요하게 평가된다. 두 사건 모두 엄청난 대중동원력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3·1운동에서는 마을의 똑똑한 청년들 중심으로 3·1기념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을 분위기에 대중들이 다분히 편승한 느낌이다. 그러나 5·10단선 거부투쟁은 “5·10 단선으로 이루어지는 정부는 우리 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더욱 고양된 의식의 확산이 있었다. 이는 증언 채록 과정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바이다.

5·10 거부투쟁에서는 각 해변마을마다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투표를 거부하기 위해 중산간 마을이나 산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내려왔다. 4·3 초기에 대중들의 선택이 어느 쪽에 있었는가 충분히 짐작된다. 증언자들은 산에 있던 사람이나, 중산간 마을에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9연대가 입산할 때(당시 송당목장에 주둔 중인 9연대 1개 대대 입산) 산쪽이 이길 것으로 믿었다. 당시 항쟁파들이 믿었던 것은, 제주민중들이었다. 그러한 자신감이 정세를 낙관적으로 판단케 한 것으로

로 보인다. 1948년 소개 후에도 “산에 피난 가 있다가 두 달만 있으면 금년 명절을 밭 뺏어앉앙 먹어진덴 허영” 올라갔다고 한다.

‘산사람’이 내걸었던 ‘반제’ 슬로건은 우리끼리 잘 살아보려는 삶을 차단시키는 외부의 규정력을 거부하는 데서 온 것이다.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민중에게 다가온 내용은 마찬가지였다. 이데올로기는 민중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자기 열망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제치하의 고통을 겪은 민중들이 반민족세력을 척결하면서 세워나가려 했던 자주적 국가는 미국의 간섭이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민중들의 힘에 의해 건설될 수 있는 정부 형태였을 것이다.

4·3의 기본적 대립구도는 제주민중과 미군정을 정점으로 한 외부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공동체 내부의 싸움이 아니었다. 1947년 2월 22일 충남북 소속 경찰 200여명이 내도할 때 이 내용을 제주경찰서장도 몰랐다. 함덕해수욕장에 있던 수용소에서 며칠을 지낸 아주머니가 제주도 출신 경찰은 육지 경찰들과 밥도 같이 못 먹었다는 증언도 있다. 4·3봉기 때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낸 호소문에는 “매국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가 쫓겨간 첫 번째 이유로 내걸어졌다.

4·3은 결코 제주도라는 작은 갇혀진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4·3은 “거대한 외압에 대한 지역민의 정의로운 저항”이었고,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특수성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건이다. 4·3 당시 제주도민들은 좌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낮에는 해안으로 밤에는 산으로 피해 다녔다는 식의 얘기는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후대의 피해인식의 소산이다. 자칫 이런 주장은 제주도민의 교육수준이 낮았고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정세의 추이를 잘 몰랐으므로 죄의식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쉽게 휩쓸려 들어갔다고 봄으로써, 당시 제주도

민을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제치하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일 투쟁, 해방직후 자율적인 사회운동 결사체의 조직, 높은 교육열, 일본·한반도 내륙과의 잦은 교류를 통한 정보의 유입 등 타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더구나 타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적 연대감, 어려운 자연 조건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함 등으로 해방공간기 한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²⁰⁾ 이러한 공동체성이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에 의해 파괴되어 나가는 지점에서 4·3이 발발하였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4·3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담긴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민중사적 역사인식의 본보기로 자리잡아야 한다.

IV. 맺음말

4·3 당시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 미쳐진 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20) 4·3봉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 제주도 현지보 취재한 「신천지」 기자 홍한표가 기술한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제주도의 지역성을 대변한다고 보인다. “금반의 사건에 참가한 사람들은 직접과 간접의 반란群측과 監警과의 두 개의 세력이며 그 대립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부인하는 편도 있으나 첫째 도민의 역사적 전통, 둘째 도민은 누구나 친척관계에 있다는 것, 셋째 배타적이라는 것, 넷째 과거부터 육지사람 이라면 걸인쯤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상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 다섯째 도민의 자존심은 실질적으로 그 수준에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아무튼 자기들의 수준이란 조선의 어느 곳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 여섯째 중간층이라는 것은 제주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 일곱째 도민의 전통적 용맹성, 여덟째 이기심이 발달되지 않아서 정이나 공동의 이익에 대하여는 언제나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것, 아홉째 생활력의 강성, 열째 전투에 대한 자연조건의 우위성 등으로 보아 과거에 반대측과 행동을 같이하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도민의 주요세력과 행동을 달리 할 수는 없다.”(「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천지」 1948년 8월호)

빛이나고자 하는 데 두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주의적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과거 독립된 단위로서 자율성을 나름대로 추구하던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자연스레 섬사람들을 하나로 봉치게 하였을 것이며, 이때 이들을 조직해낸 것은 지도부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남로당의 사회주의 이념은 섬사람들을 조직화시켜낸 사상적 외피에 불과하다.

1949년 4월 4·3사태가 진정된 후 작성된 미국 정보보고서에는 당시 제주민들의 기질을 “천성적으로 정직하고 독립적이며 육지에서 온 관료들과 이주해온 사람들과 결부되는 간섭과 도둑질과 독직 등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인민위원회의 자치활동, 3·1시위 사건, 총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제주민의 자치 의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자치 의식에 대해서 우익인사인 제주 출신 국회의원 오용국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치면울 통해서 불평불만을 느낀 제주도민은 반드시 우리가 卍由를 부르짖고 조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자연히 무슨 자유경향에 가까운 이와 같은 아마 동향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북조선에서 모든 정치공작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사람을 죽이는 도수장에 다니는 사람, 이와 같은 데에 다니는 사람을 돈을 많이 주어서 죽이게 하고 또 과격한 청년들을 돈을 많이 주어서 죽이게 하고 해서 도민은 자기의 생명이 무서워서 죄다 반란부대에 협력한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좌익사상이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²¹⁾

한편 미국측에서도, “4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는 단지 부분적으로

21) 「재한국회 속기록」, 제1회 제8호, 1948년 6월 11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주로 이북 출신들인 경찰과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청년단체 회원—이들 또한 주로 이북 출신으로 구성된 서북청년회원으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원한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분명히 모든 육지사람들을 싫어하며 남한사람들이 싫어하듯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제주도민들은 역사적 견지에 비춰 이방인들에게 치안을 맡기거나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의 치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산주의 선동가들은 이 원한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위해 나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습니다.”라고 하여,²²⁾ 이런 제주도민의 정서를 적고 있다.

그러나 3·1사건 이후 미군정의 강력한 탄압, 육지로부터 들어온 서북청년회의 행패에 직면하여 제주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그 결과는 대량 학살로 나타났다.

주제어

4·3증언, 4·3연구소, 4·3취재반, 4·3위원회, 인민위원회, 3·1사건, 4·3봉기, 5·10단독선거, 선거거부투쟁, 대학살, 초토화작전, 자치의식

22) 1948. 5. 4 <항공우편> A-58, 서울 주재 미 정치고문관이 미 국무성에 보낸 우편.

Abstract

4·3(April 3rd) Oral Testimony and Self-governing Consciousness
of Jejeans(Jeju Islanders)

Park, Chan-sik

This study tries to show self-governing consciousness in experiments and historical memories of Jejeans(Jeju Islanders) by the oral testimonies of 4·3(Sa-sam) survivors. I reviewed how Jejeans, who live in the island far from the mainland, understood the process of the new regime establishment after the liberation. I am trying to reestablish how the experiments of self-governing and autonomy which had been in the minds of Jejeans had been distorted.

All-out record of 4·3 oral testimonies was began afte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June, 1987 in Jeju island. This work was primarily performed by Jeju 4·3 Research Institute, Jeminilbo 4·3 team, 4·3 Fact-Finding Committee. Jeju 4·3 Research Institute tries to record comprehensive oral testimonies by towns(up) and villages(myon). Jeminilbo 4·3 team was focused on reporting for the 4·3 series. 4·3 Fact-Finding Committee performed the oral testimonies for writing 'Fact-Finding Report'. It meant that they recorded oral testimonies which focused on the fact-finding of the massacres.

Jejeans had pursued 'the real better life' in the period of liberation space(which means from lib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 regime). They had pursued not the regime given ideology from the above but the community society on the basis of self-governing and autonomy. But, Jejeans strongly resisted the repression of U.S. military

overnment and wrongdoing of Northwest Youth Association(Sobuk) after Sam-il Incident in 1947. That results were massacres.

During 4·3 uprising period, Jejuans had to manage to live under 'the security forces in daytime, and rioters world in nighttime'. They had to weigh which forces are strong between security forces and guerrilla forces. No ideology and no future-oriented attitudes existed just in front of the desperate survival consciousness which meant they can survive under the strong forces.

Key Words

4·3 oral testimony, Jeju 4·3 Research Institute, Jeminilbo 4·3 team, 4·3 Fact-Finding Committee, People's Committee, Sam-il Incident, 4·3 Uprising, May 10 Separated Election, Struggle for the objection of the election, massacres, scorched-earth operation, self-governing consciousness

교신 : 박찬식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사학과
(E-mail : cheju4843@hanmail.net 전화 : 016-693-0680)

최초 투고일 2005. 12. 17

최종 접수일 2006. 1. 26